

연간기획 | 國利民福: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

II.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특성 ②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시민사회

# 배려와 공정 등 자유주의의 핵심가치가 사회적으로 내면화되어야

◇ 연재순서 ◇

I. 자유민주주의의 기원과 특성

II.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특성

①, ②, ③

III. 자유민주주의와 국리민복 가치 추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V. 시민교육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복원에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민의 역할을 권위주의 지배에 대한 저항자로서 크게 부각했던 반면, 서구 정치사에서 보이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많이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민의 자발성, 자율성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예컨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국가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다. 강력한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했고 반대자를 억압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사회를 이끌고 나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은 그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뿐이었고, 시민들에게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나 자유는 허용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시장 역시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대로 운영되어 갔다. 이처럼 한국은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를 거쳤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까지는 사실상 '국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시대가 이처럼 효율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권위주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생존과 안전의 확보가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실재하는 두려움이였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에 뒤쳐진 때 국가의 안전과 생존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했던 가치이기도 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만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또다른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다. 시장이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이런 이유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더 이상 과거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었고, 한 국가의 대외적인 정책 자율성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세계화 때문에 더 이상 한 국가가 그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경제나 사회 활동의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권 국

로 고려해야 했기에 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수용적이 되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선진국을 추격하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개인의 창의성, 시장의 자율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덧붙여 정보통신혁명으로 정보의 생성, 확산, 공급에서 국가 및 전통적인 중간매개 집단의 도움 없이도 개별 시민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연결과 융합을 강조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관료의 영향력과 국가 개입의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복지 확대 등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대학 등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여전히 강하다. 이와 같은 강한 국가의 존재 속에서 시민의 자율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은 침해

## 국가를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 - '국가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인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 강조될 필요

가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영역은 통합의 가속으로 큰 제약을 갖게 되었다. 과거만큼 국가가 전지전능한 존재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국민의 불만도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지역 통합의 심화로 인해 각 국가의 정책 능력에 더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간 영역이 크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보다 효율적이었고 유능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은 미군의 시스템을 받아들여 사회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이 국가보다 유능하고 상황이 되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사고를 갖춰야 했으며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을 총체적으

로 받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의 규제와 개입이 심한 것은 우리 사회의 내부와 외부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 즉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국리민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여와 봉사,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정이라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욱 널리 수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의 국리민복 추구가 국가 주도였다면 이제는 개별 시민의 역할이 보다 중시되었다. 특히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라는 갈등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러한 가치가 중요하다. 평화통일이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특히 그동안 도외시 된 자유주의의 가치가 내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책이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종환 총재의 <책을 펴내며> 중에서

# 국리민복과 사회통합

목차

- ① 국리민복(國利民福)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
- ② 일상생활에서 자유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 ③ 탈진실(Post-Truth), 가짜뉴스 그리고 민주주의
- ④ 국리민복과 평화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기초로
- ⑤ 국리민복 가치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개선방안: 다문화 교육

발행인 박종환  
저 자 강원택 외 4인  
발행일 2019년 11월

